

신축 단지 내 유출 지하수, 하수요금 부과 논란

주민 “광주시가 관거 정비” VS 시 “원칙, 시공사 책임”

지자체마다 최적활용 모색 ‘활발’... “법령 구체화 필요”

광주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지층에서 나온 지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며 입주민 개개인에 부과된 하수요금 논란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입주민들은 유출 지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거 재정비와 생활용수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원칙 행정’과 시공사의 비용 부담 등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요구한 활용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소재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달부터 단지 전체에 부과된 하수도요금이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10월과 11월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5만 원, 1710만 원이 부과, 현재까지 입주한 가구 기준으로 1세대가 매달 1만 5000원~2만 원 가량을 내고 있다. 일반적인 가구 당 하수도 요금 대비 2배 이상 큰 액수다.

이는 지하철·터널, 대형 건축물 등의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밖으로 흘러나오지만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른바 ‘유출 지하수’ 때문이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이 아파트 단지 지층에서는 지하수가 하루 812t 이상(시공 도중 측정·신고량)이 자연 유출되고 있다. 민간 공동주택 부지 내 자연 유출 지하수 양으로 는 꽤 많은 양이다.

해당 단지에서 흘러나온 유출 지하수는 빗물·오수집하관으로 배출, 인접 하천과 관로를 거쳐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인다. 수질 검사에

서 생활용수 적합 판정까지 받은 지하수지만 배출 하수로 분류, 처리 비용이 수도 요금으로 부과된 것이다.

시공사는 단지 내 지하공간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기준치(21층 이상 건축물 부지 내 하루 30t 이상 유출) 이상으로 흘러나오자, 법령에 따라 유출 지하수 활용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했다.

‘유출 지하수의 30%는 단지 내 조경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인근 하천 지류에 배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출 지하수가 양 자체가 워낙 많아 대부분 하수로 배출, 요금으로 고스란히 부과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한다. 나아가 지하수가 하수관거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정비하고 공공 목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하수요금 부과 합리화 뿐만 아니라, 귀중한 물 자원 이용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입주민 대표는 “시가 단순히 하수요금 부담 주체, 유예 방안만 내놓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유입을 최소화

할 관거 정비가 당장 어렵다면 유출 지하수를 일부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인공 호수 조성, 살수차·준설차 용수 등 활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단지 내 지하수 일부를 돌려 필요할 때마다 각종 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배관 설비만 갖춰도 하수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소극적이고 인위적이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자체들이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유출 지하수 활용 기본계획을 세웠다. 주변 입지와 발생량 등에 대한 지하수 최적 활용을 사업 계획·설계부터 반영하고 중장기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환경부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유출 지하수를 ▲조경·공원용수 ▲물리포그(증발냉방장치) ▲냉·난방 에너지 등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델 구축에 나섰다.

빛발치는 반발에 지난 24일 광주 시·자치구와 시공사, 입주민 간 면담이 있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배출 하수만큼 부과하는 요금 체계에 따른 ‘원칙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가 공사 단계에서 행정 당국에 제출한 유출 지하수 활용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지적, 하수요금을 시공사가 상당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불필요한 깨끗한 물까지 유입되면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 원칙적으로는 요금 부과 불가하다”며 “시공사 역시 지하수 활용 계획 재수립, 비용 분담 또는 보전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사 단계에서 정확한 지하수량을 알기 어렵고, 현행 법령상 유출 지하수 활용 계획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김도기 기자

“광주군공항 이전, 어떤 방식이든 논의 준비 돼 있다”

강 시장, 전남도에 대화 촉구

강기정 시장은 지난 24일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 “어떤 방식이든 모두 논의할 준비가 다 돼 있다”며 전남도·무안군 간 3자 대화를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 총무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서로 만나야 답이 보인다”며 “전남에서 3자 간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했으니, 가장 빠른 일정을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17일 전남도가 광주 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하는 3자간 대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광주시는 이를 즉각 수용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다자·3자 등 어떤 형식의 대화테이블에도 즉각 입찰 것을 밝힌 바 있다”며 “군공항·민간공항·국제공항을 통합해 무안을 전남 평 공항시대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또 얼마 전 경제부시장이 발표했던 무안으로는 민간공항을, 함평으로는 군공항을 분리 이전하는 방식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25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5월 8일에는 함평군이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함평군의 유치는 시는 굉장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6월 26일 시는 군공항 이전비용과는 별개로 군공항 유치지역 개발을 위해 1조 원의 톤 큰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무안으로 이전하지는 적극적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유치 후보지의 여론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일상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웰니스 관광 거점 될 것”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16종 치유 프로그램

국내 해양치유관광(웰니스Wellness)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완도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전국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 가운데 가장 먼저 완도해양치유센터가 24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이 추진 중인 나머지 권역은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이다.

이 센터는 2023년까지 국·도비 208억원 등 총 354억원을 들여 신지명사실리해수욕장 일원 1만6465㎡ 부지에 연면적 774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완공했다.

해수·갯벌·해조류 등 완도의 모든 해양자원을 활용해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 건강증진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팔라소·명상·해수 등 3종의 풀장과 마드·바쓰·저주파·향기·스톤·음악·컬러·소리·해조류

거품 등 9종의 테라피를 포함해 16종의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주변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체험공원이 조성돼 휴식과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의료·관광·바이오산업이 융·복합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호텔(리조트), 골프 테마파크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치유관광(웰니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테이프 커팅

을 축하하는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이 지난 24일 완도군 신지명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영록 지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개관

/전남도 제공

친환경자동차 센터 본격 가동 2면

내부인사 잠을 국경원장 경질 3면

치소는 금리에 이자부담 막막 4면

